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연금도시 구상”

민주 이원택 의원, ‘햇빛·바람 연금 정책’ 제시... 새만금 권역부터 시작 도내 타 시군 확대 단계적 지급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20일 도내 새만금 지역 등지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도내 농어민과 예술인 기본소득을 포함한 도민 체감형 소득 확대에 나서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햇빛·바람 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을 가지고 기존 성장 중심 정책에서 배당 경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민의 어려움과 청년 취업난, 양육·부양 부담을 언급하며 “낙연한 성장 중심 정책이 아닌 도민의 지갑에 직접 돈이 들어가서 도민이 체감해야 진짜 경제”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새만금 지역 등지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도내에 현재 2개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마을을 2단계로 군 단위 지역으로 과감히 넓히고 3단계로 도내 전역의 농어촌으로 확대해 농촌의 붕괴를 막고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재명 정부가 전국 1만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을 도내 200곳 이상에서 추진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최전선에서 막아겠다는 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세 번째로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의 도시, 전북에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우리의 문화

를 지키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선 1000여명의 예술인을 상대로 창작 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하고 이를 전체 예술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문화와 예술이 막혀주는 낙연한 창작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은 특히 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인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처럼 이 의원이 제시한 ‘연금도시’ 구상은 지방 경제 모델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핵심은 재생에

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직접 현금을 배분하는 ‘배당 경제’로의 전환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 구상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으로는 지역에 머무는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맞물려 이를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닌 ‘수익 공유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은 지난 20일 오전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도정 주요 일정과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내일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 세미나

도, 23~27일 도정 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은 지난 20일 오전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도정 주요 일정과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23일에는 일자리 정책 협의회가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주재로 열려, 기존 로컬 잡센터의 일자리센터 전환 문제를 놓고 시·군 부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4일에는 제2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협조 요청과 함께, 계곡·하천 불법 점거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 지시사항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 세미나’가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며, 윤준병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지역 통합방위회의가 24일로 조정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른 테러 위협 증가에 대비해 행정·군·경찰·소방·국가 주요시설이 참

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에는 사실 구급차 운영 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불법·탈법 운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으로, 관리 체계 정비를 점검할 방침이다.

27일에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시·군 합동 징수반 운영 성과가 발표된다.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그간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정리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현안 대응을 위해 다양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김관영 도지사는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수출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과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관련 연구기관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도청 내 국장 등 근무 일정으로는 농번기 대비 농촌 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26일 건설교통국장의 광역교통위원회 회의 참석, 마태참다산사업장의 수수분야 전량개사가 참여하는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관련 대응을 위해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도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이만호기자

“대한민국 파크골프 중심도시 익산”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조용식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을 대한민국 파크골프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일 민경강 파크골프포장을 찾아 동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파크골프는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는 생활체육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 산업”이라며 “전국 대회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익산을 파크골프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에는 민경강 일원 36홀과 합열 일원 18홀 등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합열 추가 18홀과 부송동 일원 18홀 조성도 진행되고 있다.

조 후보는 이에 더해 동부권 왕궁과 서부권 금강 하천부지에 각각 18홀을



추가 조성해 도시 전역에 균형 있는 파크골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운영 시스템 개선과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숙박·음식·관광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르신 중심의 생활체육을 넘어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전지훈련 유치 등 전략적 운영을 통해 파크골프 도시 익산 브랜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시민 제안, 정책으로... 시민참여형 정책 확정

김대중 정읍시장 예비후보

김대중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시민 제안을 반영한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2025년을 대전환 구상을 본격화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시민 정책 공모 결과를 토대로 ‘시민 참여형 정책 2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시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과 재원 등을 보완해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정읍 청년 채용 연



계 인턴십 △정읍 아이-1억 드림이다.

‘청년 채용 연계 인턴십’은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읍 아이-1억 드림’은 출산부터 성년까지 총 1억원

윤정훈 도의원, 민주 무주군수 경선 확정 “희망·정책으로 승부”

무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윤정훈 전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입정문을 통해 “이제 더불어민주당 무주군수 경선 후보자로 최종 확정됐다”며 “군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일부 흑색선전과 오보가 있었지만, 자신은 건강하며 선거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비밀이 아닌 희망과 정책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무주=송훈기 기자

“전북 6·3 지선, 국회의원 재선거 필승... 투명성 최우선”

윤준병 민주 도당위원장, 지선 공천 진행 상황 등 설명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공천 일정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진행 상황과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북 지역 주요 현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산조선소 관련 투자 협약 체결을 비롯해 제3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국립 의전환원 논의 진전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추진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전북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와 가능성도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기대와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치

권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이 정책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전북 발전의 적기”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지역 인재를 선출해 향후 4년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 정책 실행력을 갖춘 인재 선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위원장은 “중앙당 인준과 재심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거 일정 관리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며 “특히 안심번호 신청 과정에서 기간이 도과돼 재신청하는 과정이 발생하면서 전체 일정이 약 열흘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으로 “기초의원 후보는 4월 20일 전후 광역 및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후보는 4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천 기준과 관련해 “부적격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하되 능력과 경쟁력 측면에서는 인위적인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며 “가능한 한 경선을 통해 도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공천 과정의 특징으로 ‘공개 검증 강화’를 제시했다.

합동연설회는 이달 28일부터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위원회가 선정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후보자뿐 아니라 지역 당원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면서도 “공관위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후보의 부적격 처리와 관련해 ‘법외 경력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며 “과거 중앙당 판단과 현재의 강화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에 오래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당에 대한 기여는 존중해 주지만 해당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선거문화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그만 베라, 많이 아프다”... 전주시 벌목 정책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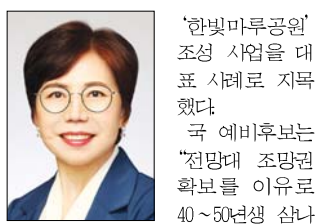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생태계 보전 핵심 공약 발표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현 시정의 벌목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생태계 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 예비후보는 “그만 베라, 많이 아

프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범기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벌목 행정을 “단순한 정비가 아닌 생태계 파괴”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완산철물 일대



‘햇빛마루공원’ 조성 사업을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국 예비후보는 “전망대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40~50년생 삼나무 숲을 무참히 훼손했다”며 “20여년의 예산이 투입

됐지만 결과는 자연을 살린 공간이 아니라 산등성이를 90도로 절개한 옹벽과 파괴된 생태계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 시장 취임 이후 전주 전역에서 이어진 벌목 사례를 열거하며, 일련의 조치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불통 행정이 반복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